

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의 세대 및 이념요인

배진석*

I. 문제 제기
II. 선행연구
III. 예비분석

IV. 회귀분석
V. 요약 및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는 대북정책과 안보정책 영역에서 세대 및 이념요인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는 연령에 따라 단선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둘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미치는 이념의 영향력은 세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셋째, 정책조합에 따라 세대 및 이념이 영향력을 미치는 조건이 달라진다.

2017년 대선 직전에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발견했다. 첫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1970년대 출생 세대가 그 이전 혹은 이후 세대보다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았다. 둘째, 197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에서는 이념인식이 대북 및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이후 청년세대에서는 진보-

보수의 이념인식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에서 연령은 효과가 없고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이 엇갈릴 때에는 이념 대신 연령효과가 확인되었다. 진보-보수라는 이념균열 내에 부분집합으로 쌍을 이루던 교류협력-강경(대북관계), 자주-한미동맹(안보), 복지-성장(경제정책)의 조합이 청년세대-중장년세대라는 세대균열과 중첩, 강화되어 왔다면, 이 연구의 경험적 발견은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정치균열구조가 세대균열 축을 중심으로 완만한 각도로 교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주제어: 대북정책, 안보정책, 연령효과, 이념효과

DOI: 10.17331/kwp.2018.34.2.004

*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저서 및 논문 “권위주의체제의 선거동원용 분배전략: 유신 및 제5공화국 사례연구,” 『평화연구』, 26권 1호: 107-140 (2018) 외.

I. 문제 제기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는 투표선택 측면으로 보면 젊은 수록 진보후보를 선택하고, 나이 들수록 보수후보를 선택하는 연령효과가 작동한 선거였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이슈로 들어가 보면, 세대요인의 작동방식은 투표선택과 다르게 표출되었다. 진보 유권자가 보수정책으로 평가되어온 대북 강경정책을 선호하기도 하고, 복지우선 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젊은수록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선호한다는 통념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 중 청년세대는 절반만이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중장년세대는 압도적으로 지지해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젊은 유권자는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나이 든 유권자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세대투표 현상을 이 연구는 대북 및 안보정책 이슈 차원에서 검토한다. 기존 연구가 국민들의 대북인식이나 통일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연구는 인식과 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의 세대요인을 정책에 대한 평가로 전환한다. 교류협력-강경으로 양분되는 대북정책 영역과 사드배치의 찬반 여부 등과 같은 안보정책 영역에서 이념 및 세대요인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세대투표현상처럼 대북정책과 안보정책 영역에서도 젊은 유권자는 진보정책을, 나이 든 유권자는 보수정책을 지지하는가? 혹은 최근의 대북인식이나 통일관련 설문 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이른바 청년세대는 보수화되고 오히려 중장년세대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대북인식을 보이는가? 둘째, 대북정책과 안보정책 영역에서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구분은 여전히 유효한가?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이념인식은 같은 기준인가? 셋째, 대북정책과 안보정책 영역에서 전통적인 진보-보수 시각이 상호 충돌하는 정책적 조합은 유권자

들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는가? 이때 이념인식과 세대요인은 어떤 조건에서 발현 또는 소멸하는가?

이 연구가 제시하는 가설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는 연령에 따라 단선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북 및 안보정책의 이른바 연령대효과 가설이다. 젊은 세대는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고 나이 든 세대는 강경책을 선호한다는 기존의 일률적인 연구 경향에서 탈피해, 이 연구는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특이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대북 및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통제하는 인과모형으로 확증한다. 둘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념인식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전제하에, 세대에 따라 자신의 이념을 구성하는 요인이 달라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른바 이념의 연령대별 차별효과 가설이다. 첫 번째 가설(연령대효과)이 세대 간 차이에 주목했다면, 두 번째 가설(이념의 연령대별 차별효과)은 세대 내 분화현상에 주목해 첫 번째 가설의 원인을 추론한다. 셋째, 이념과 연령 혹은 세대는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의 방향 평가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원인이지만, 정책조합에 따라 각각의 변수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건은 상이할 것이다. 이른바 정책조합의 이념 및 세대 분화 가설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동아시아연구원(EAI)의 2017년 대선 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술통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경험적 증거를 발견했다. 첫째, 1970년대 출생 유권자는 그 이전 혹은 이후 세대보다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더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덜 찬성한다. 둘째, 자신의 이념을 진보적으로 인식할수록, 중장년층은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청년층은 복지우선 정책을 선호한다. 반대로 자신의 이념을 보수적으로 인식할수록, 중장년층은 대북 강경책을 지지하고 청년층은 성장우선 정책을 선호한다. 셋째, 전통적 진보시각(대북 교류협력정책-탈미 자주국방)과 전통적 보수시각(대북 강경책-한미동맹 강화)의

조합에서는 여전히 이념의 영향력이 작용하지만,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상충되는 조합(대북 교류협력정책-한미동맹 강화 혹은 대북 강경책-탈미 자주국방)의 경우에는 이념보다 연령이나 세대요인이 작동한다.

위의 경험적 발견에 근거해 이 연구는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정치균열구조가 세대균열 축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교차(cross-cut)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이 연구는 세대에 따라 구성하는 이념인식의 요인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가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에 투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기존 연구가 세대 간 이념 분화를 단선적으로 접근해온 것을 극복하고자, 이 연구는 구체적 정책의 영역에서 이념 및 세대의 분화양상을 관찰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같은 영역으로 구분되던 대북정책과 안보정책 간에도 이념과 세대가 교차하면서 두 이슈 간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논지와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대북 및 안보정책 영역과 선거연구의 연령 및 세대효과가 만나는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Ⅲ장에서는 기술통계 자료를 근거로 연구가설을 예비적으로 검토한다. Ⅳ장은 회귀분석으로 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와 관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이념 및 세대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다. Ⅴ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서 연구의 함의와 한계에 대해 검토한다.

Ⅱ. 선행연구

북한 혹은 북한문제에 대한 태도는 한국사회에서 좌-우 혹은 진보-보수 구분의 가장 유용하고 확실한 잣대였다(강원택, 2005; 김무경·이갑윤, 2005; 박영득·이재묵, 2016; 윤성이, 2006; 이내영, 2002; 허석재, 2014). “북

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면 보수주의자로 규정되며, 북한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햇볕정책을 지지하면 진보주의자로 분류”(윤성이, 2006: 166)된다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강원택(2005)의 연구에 따르면, 서구사회의 진보-보수 구분은 크게 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경제적, 물질적 가치의 배분과 관련된 좌우의 구분, 둘째, 법과 질서 그리고 전통을 강조하는 ‘권위’와 사회적 질서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구분, 셋째, 보수에 의해 강조되는 근대적 가치와 진보에 의해 옹호되는 탈근대적 가치의 구분이 바로 그것이다. 강원택은 여기에 반공이데올로기의 수용 혹은 거부를 둘러싼 갈등을 한국적 특수성으로 설명하면서,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태도야말로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핵심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실제로 북한문제는 한국사회를 가로지르는 핵심 균열인 동시에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흡수하는 블랙홀이기도 했다. 한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에 ‘친북’ 혹은 ‘중북’이라는 표식이 등장하면, 갈등의 본질은 대부분 증발되고 말았다. 이 점에서 대북문제는 북한과의 외교적, 군사적 관계에서 비롯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선호의 차이 혹은 정책 간의 대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강원택, 2005: 197)로 귀결된다.

북한문제가 이념갈등의 주요 소재라면 이념 차이는 주로 세대 간 차이로 표출됐다(허석재, 2014). 이전 시기의 지역균열이 다소 약화되면서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관련 이슈들이 전면에 등장했고, 이 시기에 햇볕정책의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들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반해 나이 든 세대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부각했다는 것이다. 2002년 제16대 대선은 이념갈등이 세대 간 갈등과 일치하고 중첩되어 구체적인 투표행위로 나타난 사건이었다. 세대효과는 주로 선거연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계기는 2002년 대선을 전후로 주목받게 된 386 세대의 정치적 역할 때문이었다(강원택, 2003; 이내영, 2002).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연령대별로 고른 지지를 받으며 세대효과에 대한 논의는 가라앉았다가,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재점화되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대조적인 세대 간 지지율 차이가 그 배경이었다(노환희·송정민 외, 2013; 문우진, 2016; 오세제, 2015; 오세제·이현우, 2014; 허석재, 2014).

1960년대생의 이념성향 및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재점화된 세대 논의는 이 세대가 진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세대효과), 혹은 보수화되고 있는지(연령효과) 그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졌다. 많은 연구들은 2007년 대선을 지나면서 386 세대효과와 소멸을 선언했다(강원택, 2009; 박명호, 2009; 박원호, 2012; 서현진, 2008; 허석재, 2014). 당시 1960년대생을 포함해 청장년층의 상당수가 보수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 세대의 진보성은 소멸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주장도 있다. 2012년 대선에서 386 세대효과가 유지되었다는 주장이다(노환희·송정민 외, 2013; 오세제, 2015; 오세제·이현우, 2014). 1960년대생의 진보성 유지를 정치세대적 특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건한 진보적 투표성향 변화가 매우 완만한 폭과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연령효과와 예외현상으로서 세대적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배진석, 2017).

선거연구에서 1960년대생의 진보성 유지 혹은 소멸이 세대연구의 주요 관심사였다면, 대북인식 및 통일연구에서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는 2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세대의 보수화 논의이다. 젊은 세대에서 확인되던 ‘대북 교류협력·적극적 통일관·자주’ 등의 진보 패키지가 ‘대북 강경·소극적 혹은 유보적 통일관·한미동맹’ 등의 보수 패키지에 의해 영향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북한 혹은 대북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세대별 태도에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박원호, 2012), 그 배경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권력세습과 공포정치 등이 거론된다(허석재, 2014).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햇볕정책 및 평화번영정책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봉쇄정책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는 배경요인이다.

많은 연구들이 2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세대의 특성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설명했다. 이들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당위론적 통일인식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개인 이익을 중시하는 이 세대는 통일 이후의 사회적 갈등이나 경제적 득실 등의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그 결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통일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권영승·이수정, 2011; 김병조, 2015; 변중헌, 2012).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들 청년세대의 집단적 특성이 강조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청년세대는 많은 연구가 직간접적으로 묘사한 바와 같이 정말 보수화된 것인가? 북한에 대한 태도에 따라 구분되던 기존의 진보-보수 접근 방식에 의하면, 이들이 보수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진보의 아이템이던 자주국방 대신 한미동맹의 유용성이 대두되었고, 그 배경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협이 있었다.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의 불안정을 가속화시키는 북한에게 더 이상 교류협력의 대북정책이 무용하다는 보수 측의 주장도 대북 강경책에 힘을 실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청년세대가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관적 이념평가에서 이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이전 세대보다 진보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대북인식과 기존의 진보-보수 이념인식 사이의 간극은 선거 연구에서 비당파적 유권자층에서 나타나는 태도 불일치와 관련된 논쟁을 연상시킨다. 전통적인 선거연구가 이런 태도 불일치를 무관심이나 무지의 결과로 이해하고 일탈적인 상황으로 규정(Converse, 2000)하는 것에 반해, 상충적 태도갈등(ambivalent attitude conflict)의 개념을 사용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태도 불일치를 무관심이나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결과로 이해한다(Basinger and Lavine, 2005; Zaller and Feldman, 1992). 정한울(2013)의 연구는 유권자의 정당태도 변화에서 주로 사용되던 상충적 태도갈등 개념을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영역으로 확대

했다. 유권자들은 전통적 진보-보수 시각의 이분법에서 벗어나고 있고, 북핵해결을 위해 남북대화를 우선하라는 ‘보수적 대화론자’와 북핵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진보적 한미동맹론자’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세대 간 이념결정요인이 다르다는 연구(윤성이·이민규, 2014)도 청년세대의 대북인식 변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청년세대와 그 이전 세대는 각자의 정치사회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진보-보수의 이념성향을 결정하는 요인도 다르다는 것이다. 중장년세대는 기존 처럼 북한에 대한 태도에 따라 자기 이념을 인식하지만, 청년세대의 이념 인식에는 대북관련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년세대는 북한에 대한 태도 대신 분배와 성장 등 복지관련 태도로 진보-보수의 이념 틀을 따른다. 이전 세대가 청년기에 표출했던 교류협력 중심의 ‘진보적’ 대북관을 이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정한울(2013)의 지적 처럼 북핵 해결을 위해 포용론 대신 강경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찬성하지만, 취업난 등의 경제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성장보다 복지우선 정책을 지지하는 진보 유권자의 출현이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위의 이론적 검토 결과, 대북정책과 관련된 기존의 세대 간 차이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허석재(2014)의 연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젊은 세대는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나이 든 세대는 경계심을 가진다는 관찰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 부정되고 있다. 20~30대 청년세대들은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대북 교류협력정책에 부정적이고, 이와 연관되어 사드배치 등과 같은 한미동맹 강화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족주의 담론에 크게 영향받은 이전 세대가 오히려 통일위원의 관점에서 대북 교류협력에 더 적극적인 선호를 가질 수 있다. 실제 정근식·김선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50%를 상회하는 국민이 민족주의 담론으로 통일을 사고하고 있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그 비율은 증가한다. 최근 들어 1970년대 출생 유권자가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에 있어 전통적 진

보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보고가 기술적 통계에 그치고 있고 다른 원인변수를 통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대의 대북관련 태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연령대효과

1970년대 출생 유권자는 그 이전 혹은 이후 출생 세대보다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다.

이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대북 및 안보정책의 세대효과가 검증된다면, 기존 통념과 다른 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성이·이민규(2016)의 주장처럼 정치사회화 과정이 다른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는 이념인식 요인 또한 다를 수 있다. 민족주의 담론에 영향을 받은 중장년세대는 대북관련 인식으로 자신의 이념을 규정하고,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세대는 복지·성장의 구도로 자신의 이념을 규정한다는 논리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하다. 이 논의를 확장하면 중장년세대의 대북관련 인식은 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청년세대의 대북관련 인식은 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가설 2〉 이념의 연령대별 차별효과

중장년층의 이념은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태도로 결정되고, 청년층의 이념은 복지 대 성장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 복지 대 성장에 대한 태도는 중장년층 이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태도는 청년층의 이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한울(2012, 2013)의 주장처럼 기존의 전통적 진보-보수 시각과 다른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이 연구는 대북정책에서 ‘교류협력정책

대 강경책' 그리고 안보정책에서 '사드배치 찬성 및 반대'라는 영역별 두 가지 정책 옵션으로 네 가지 조합을 구성하고 각각의 조합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수를 규명한다. 두 번째 가설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된다면, 중장년세대는 여전히 대북정책이나 안보정책으로 자신의 이념인식을 구성하기 때문에 '대북 교류협력정책-사드배치 반대'와 같은 전통적 진보시각이나 '대북 강경책-사드배치 찬성'과 같은 전통적 보수시각의 조합에서는 이념의 영향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존 진보-보수 시각과 상충되어 보이는 '대북 교류협력정책-사드배치 찬성' 혹은 '대북 강경책-사드배치 반대'의 조합에서는 이념보다 연령 혹은 세대의 특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

〈가설 3〉 정책조합의 이념 및 세대 분화

대북 교류협력정책-사드배치 반대 조합이나 대북 강경책-사드배치 찬성 조합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이념이 정책태도를 결정하고, 대북 교류협력정책-사드배치 찬성 조합이나 대북 강경책-사드배치 반대 조합에서는 이념에 관계없이 나이가 정책태도를 결정한다.

Ⅲ. 예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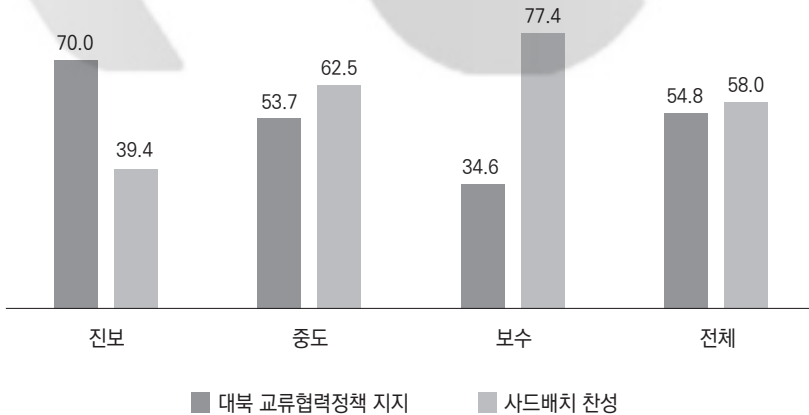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이념과 세대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및 사드배치에 관한 여론분포를 집합적 자료 수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남북관계 및 사드배치 관련 이념별 분포

〈그림 1〉은 응답자의 이념별로 대북 교류협력정책 및 사드배치에 관한

지지율을 표시한 것이다. 전체 응답자의 54.8%와 58.0%가 각각 대북 교류 협력정책과 사드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진보성향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70.0%는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고, 39.4%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였다. 이념적으로 중도성향 응답자의 53.7%와 62.5%는 각각 대북 교류협력정책과 사드배치에 찬성하였다. 반대로 보수성향 응답자는 34.6%가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고, 77.4%가 사드배치에 찬성하였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진보성향의 응답자는 대체로 대북 강경책보다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보수성향의 응답자는 그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보수성향의 응답자는 대체로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진보성향의 응답자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중도성향 응답자의 지지경향은 대체로 진보와 보수 성향 응답자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남북관계 및 사드배치 관련 이념별 분포



출처: 동아시아연구원, '2017년 대선 패널조사'¹⁾

1)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이 논문에서 사용된 모든 데이터는 동아시아연구원의 '2017년 대선 패널조사'임을 밝힌다.

다만 <그림 1>은 진보성향 응답자의 30%가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고, 보수성향 응답자의 34.6%가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선호한다는 사실도 동시에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진보성향의 39.4%는 사드배치에 찬성하고, 보수성향의 22.6%는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큰 흐름에서 진보는 대북 교류협력정책 및 사드배치 반대, 보수는 대북 강경책 및 사드배치 찬성과 맥을 같이 하지만, 이 조합에서 벗어나는 비율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2. 남북관계 및 사드배치 관련 연령대별 분포

이 연구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0년 단위의 연령대를 구분하는 방식을 택한다. 선거연구에서 코호트(cohort) 분석으로 많이 활용되는 세대효과는 사회화 시기의 특수한 정치적 경험에 따라 형성된 특정 세대의 정치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했다.²⁾ 다만 일반적인 코호트 분석은 장기 시계열 자료를 필요로 하지만(허석재, 2014), 이 연구에 주로 사용된 자료는 2017년 대선 직전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이므로, 특정 시점에서 1회성 관찰로 확인된 특정 연령대의 정치적 특성을 세대효과로 주장할 수 없다.³⁾ 다만 특정 선거시점에서 20대, 30대, 혹은 40대 등의 분류보다는 이후 코호트 분석으로 확장하기 위한 탐색연구 전략 차원에서 출생연도 기준의 구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뒤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 북한 및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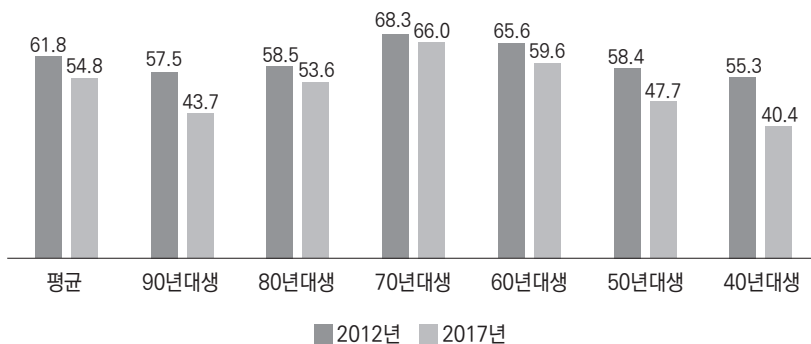
2) 초기 세대효과 연구에서는 전전세대(~1949년), 민주세대(1950~1961년), 신세대(1962~1970년) 등의 구분(정진민, 1992, 1994; 정진민·황아란, 1999)이 주류였다. 이후 산업화세대(~1959년), 386세대(1960 혹은 1962~1969 혹은 1970년), X세대/IMF세대/디지털세대 등으로 세대구분의 기준이 분화되었다(김형준, 2006; 노환희·송정민 외, 2013; 오세제, 2015; 이우진, 2014; 허석재, 2014; Cho and Eom, 2012).

3)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세대효과' 대신 '연령대별 효과'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 연구에 간헐적으로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세대'라는 표현은 특정 사회화 경험을 공유하는 코호트와 구별된다.

일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연령대와 구별되는 1970년대생의 정치적 태도를 기술통계 차원이 아닌 분석통계 차원에서 검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와 달리 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70년대생의 정치적 태도가 그 이전 및 이후 세대와 구별되는지 사실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이 연구의 추가 분석을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⁴⁾

〈그림 2〉는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 때 조사된 결과를 비교해, 최근 5년 사이의 대북 교류협력정책에 대한 지지율 변화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것이다. 우선 두 시기의 공통점은 중년층이 교류협력에 가장 적극적이고, 청년층과 노년층은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두 시기 모두 70년대생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최고령층인 40년대생과 최연소층인 90년대생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연령대에 따라 역U자형 분포를 나타내는 셈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은 교류협력정책을, 중장년층은 강경책을 선호한다는 기존의 통념이 이미 2012년 대선 국면에서도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남북관계 관련 연령대별 분포: 2012 및 2017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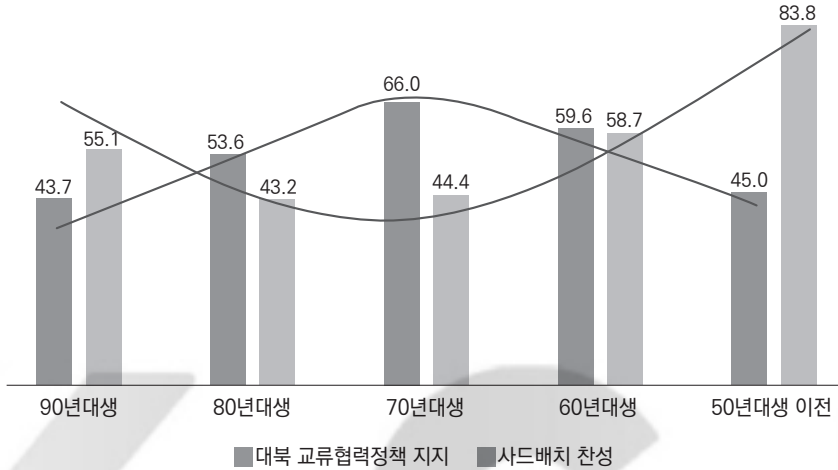


4) 이 연구의 IV장에서 70년대생과 그 이전 및 이후 세대의 태도 차이를 회귀분석으로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표장의 예비적 기술통계분석에서는 그룹 간 관찰빈도 차이를 확인하는 카이제곱 검정을 생략한다.

두 시기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대북 교류협력정책에 대한 연령대별 편차가 커졌다는 점이다. 2012년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70년대생과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던 40년대생의 차이는 13%p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두 세대 간 지지율 차이가 25.6%p로 두 배 가까이 커졌다. 두 시기 모두 역U자형 분포를 나타내지만, 2012년에 완만하던 기울기는 2017년에는 훨씬 가팔라졌다. 이 차이는 세대별로 두 시기의 변화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12년에 비해 2017년의 대북 교류협력정책에 관한 지지율 전체 평균은 61.8%에서 54.8%로 약 7%p 가량 하락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등에 따른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감안할 때 교류협력정책에 대한 지지율 감소는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다만 지지율 하락의 세대별 편차가 흥미롭다. 편차가 가장 큰 세대는 14.9%p 하락한 최고령층인 40년대생과 13.8%p 하락한 최연소층인 90년대생이다. 반면 두 시기 모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 70년대생의 하락률은 2.3%p에 불과했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대북정책 인식에 미친 영향이 세대별로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0년대생은 그 변화를 대북정책 인식에 크게 반영하지 않았으나, 최고령층과 최연소층은 민감하게 반영했던 것이다.

〈그림 3〉은 〈그림 2〉의 2017년 대북 교류협력정책 지지율 자료에 연령대별 사드배치 찬성률을 추가해 비교한 그림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대별 대북 교류협력정책 지지율은 역U자형 분포였으나, 사드배치 찬성률은 이 모양을 뒤집은 U자형 분포로 나타났다. 최고령층인 50년대 이전 출생 응답자는 83.8%가 사드배치에 찬성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70년대생과 80년대생은 43~44%대로 가장 낮은 찬성률을 나타냈다. 주로 20대 청년층인 90년대생은 최고령층만큼은 아니지만, 70년대생과 80년대생보다 10%p 이상 높은 비율로 사드배치에 찬성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3〉 남북관계 및 사드배치 관련 연령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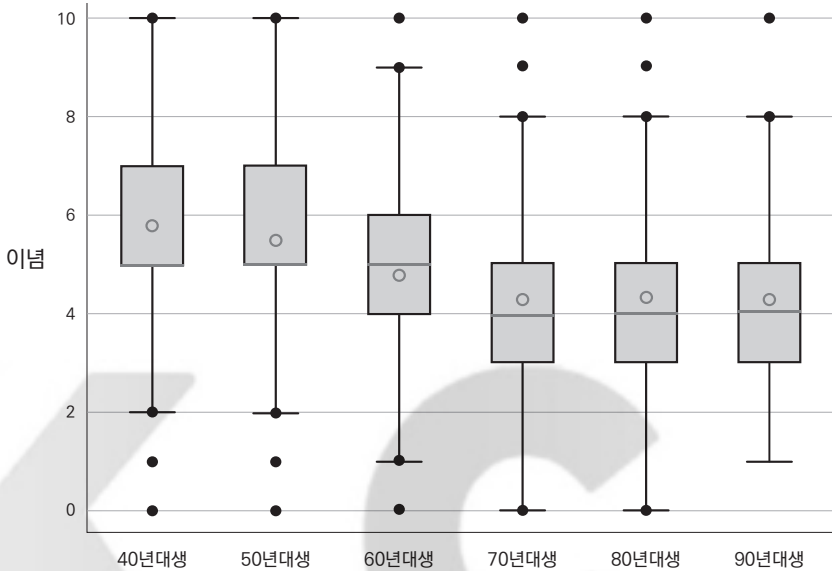


이상 〈그림 2〉와 〈그림 3〉을 통해 청년세대인 80년대생과 90년대생은 더 이상 대북 교류협력정책의 적극적 지지자로 보이지 않고, 이들의 사드 배치 찬성률도 그 이전 세대에 비해 결코 낮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청년세대가 보수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 아래에서는 주관적 이념평가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연령대별 이념분포

〈그림 4〉는 연령대별 자기이념 평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자신의 이념성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11점 척도(가장 진보 0~중도 5~가장 보수 10)로 묻는 질문에 대해, 나이 든 세대는 보수적으로 그리고 젊은 세대는 진보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였다. 연령대별 상자그림(box plot) 내에 점으로 표시된 이념평균을 살펴볼 때 40년대생 5.91, 50년대생 5.47, 60년대생 4.86, 70년대생 4.32, 80년대생 4.38, 그리고 90년대생 4.22로 각각 조사됐다.

〈그림 4〉 주관적 자기이념 평가의 연령대별 분포



출처: 배진석(2017: 170).

연령대 내 이념분포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배진석, 2017: 169-171). 40년대생과 50년대생은 보수 쪽으로 확연히 치우쳤다. 상자그림에서 확인되듯이, 40년대생과 50년대생의 1사분위(Q1, 박스 아랫면)와 중위값(median)이 5로 일치하였다. 즉 40년대생과 50년대생 중 진보성향 유권자(0~4)는 25% 이하이다. 3사분위(Q3, 박스 윗면)가 숫자 7인 점을 감안하면 25% 이상이 매우 보수적(8~10)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였다. 70~90년대생의 자기이념 평가 분포는 이와 상반된다. 이들 세대의 중위값이 4로 표시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Q1과 Q3은 각각 3, 5로 나타났다. 60년대생은 그 이전 세대 및 이후 세대와 구분되는 자기이념 평가 분포를 나타냈다. 60년대생의 이념평균은 4.86으로 중도(5)에 근접하였

고, Q1과 Q3도 각각 4, 6으로 중도와 진보, 보수가 고르게 분포되었다.

〈그림 4〉의 분석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세대가 보수화되었다.”는 주장과 차이가 있다. 80년대생 및 90년대생은 대북 교류협력에 소극적이고 사드배치 찬성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기존 청년세대가 진보적인 것으로 인식되던 정책태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태도는 기존 관점에서 보면 진보보다 보수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진보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북관계 및 북한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안보태도가 진보-보수를 가르는 가장 확실한 잣대라는 이전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로써 대북정책 및 안보정책 영역에서 기존의 진보-보수 관점과 상충될 수 있는 태도의 조합이 실제로 가능하고,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4. 정책조합의 이념 및 세대 분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관계에서 대북 교류협력정책 지지와 안보 측면에서 자주국방은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전형적인 태도로 여겨졌고, 주로 청년세대에서 쉽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대북 강경책 지지와 한미동맹 강화는 보수성향 유권자들에게 잘 맞는 조합으로 인식되었고, 주로 중년 이후의 고연령층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5〉는 남북관계와 사드배치를 두 축으로 각각의 태도 조합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교류협력정책은 응답자의 54.5%가 지지했으나, 강경책도 45.5%가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배치 찬성은 57.8%에 달했지만, 반대도 42.3%가 되었다. 대체로 교류협력과 사드배치 찬성이 절반 조금 넘게 지지를 받았지만, 사실상 각각의 정책 찬반이 확연히 갈렸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 남북관계 및 사드배치 관련 조합 비교

		사드배치	
전체 1,091명 (100%) 연령평균: 46.9세 이념평균: 4.75		반대: 42.3% 연령평균: 42.2세 이념평균: 3.97	찬성: 57.8% 연령평균: 50.0세 이념평균: 5.35
남북관계	교류협력: 54.5% 연령평균: 46.2세 이념평균: 4.23	〈조합A〉 33.3% 연령평균: 43.4세 이념평균: 3.89	〈조합B〉 21.3% 연령평균: 50.2세 이념평균: 4.72
	강경: 45.5% 연령평균: 47.3세 이념평균: 5.39	〈조합D〉 9.0% 연령평균: 37.9세 이념평균: 4.26	〈조합C〉 36.5% 연령평균: 49.7세 이념평균: 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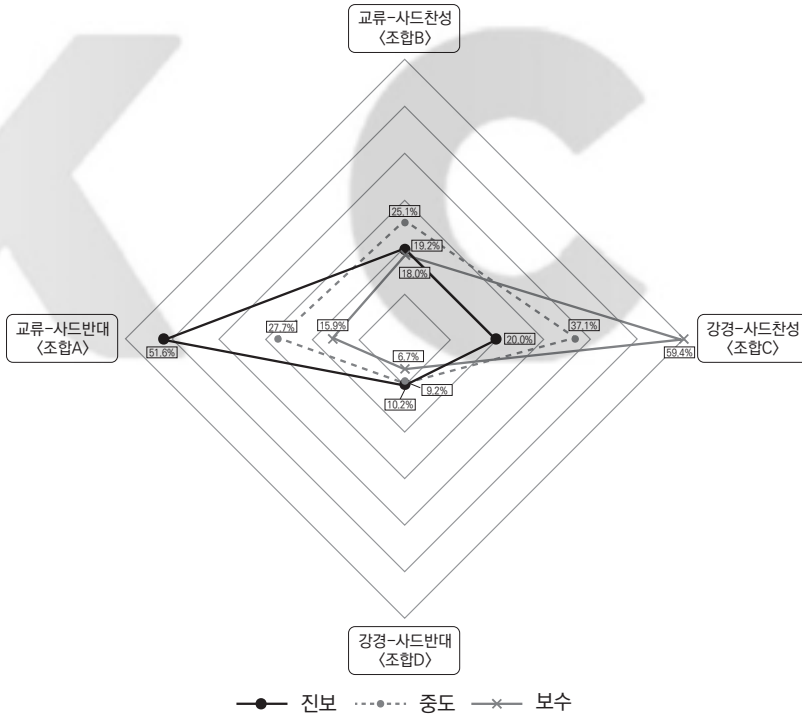
〈그림 5〉에서 ‘조합A’는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조합으로, 전체 응답자의 33.3%가 이에 해당한다. 이 조합은 기존 관점에서 전형적인 진보시각과 일치한다. 이는 이들의 이념평균이 3.89로서 네 조합 중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연령평균은 전체 평균보다 조금 낮은 43.4세이다. ‘조합C’는 대북 강경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조합으로, 전체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인 36.5%가 이에 해당한다. 이 조합의 이념평균은 5.72로서 다른 조합과 비교할 때 전형적인 보수시각이라 할 수 있다. 연령평균은 49.7세로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합A와 조합C가 전체 응답자의 70% 정도를 포괄해 기존의 진보-보수 시각이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진보-보수가 보여준 조합과는 다른 조합이 나머지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지만 사드배치 역시 찬성하는 21.3%의 응답자가 ‘조합B’에 해당한다. 기존의 진보-보수 관점으로는 이 두 정책의 조합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조합의 연령평균은 50.2세로서 네 조합 중 가장 높고, 이념평균은 전체평균과 유사한 4.72로 나타났다. ‘조합D’는 대북 강경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조합이다.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9%로 나타나 다른 조합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연령평균은 37.9세로서 다른 조합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또한 이념평균은 4.26으로서 조합A에 이어 두 번째로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를 통해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에서 각 조합의 규모, 이념 및 연령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제 각 조합이 실제 이념과 연령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6〉과 〈그림 7〉이 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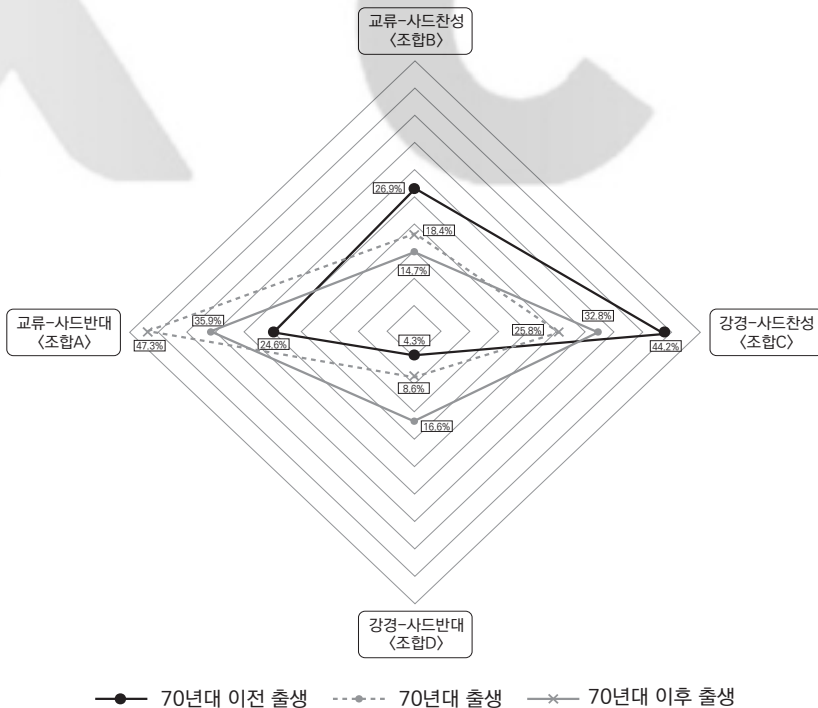
〈그림 6〉 남북관계 및 사드배치 관련 이념별 분포



〈그림 6〉과 〈그림 7〉의 네 축은 각각 〈그림 5〉의 네 조합을 표현한다. 〈그림 6〉은 응답자의 주관적 이념평가를 근거로 각각 진보, 중도, 보수별로 네

조합에 분포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예상대로 진보와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각각 조합A와 조합C에 절반 이상이 분포되어 <그림 6>에서 좌우로 넓게 분포되었다. 반면 점선으로 표시된 중도성향의 응답자는 조합A와 조합C에 치우치기보다 상하로 고루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합A는 진보(51.6%) > 중도(27.7%) > 보수(15.9%) 순으로, 조합C는 보수(59.4%) > 중도(37.1%) > 진보(20.0%) 순으로 분포되었다. 이처럼 <그림 6>의 가로 두 축인 조합A와 조합C는 이념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상하 축인 조합B와 조합D에서는 이념적 규칙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조합B에서는 중도성향이 25.1%로서 진보와 보수 성향의 응답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진보-보수 성향의 응답자 사이에

<그림 7> 남북관계 및 사드배치 관련 연령대별 분포



큰 차이는 없었다. 대북 강경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조합D에서는 중도와 진보 성향이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였고, 보수성향은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7〉은 〈그림 5〉의 네 조합의 연령대별 분포를 나타낸다.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연령대는 세 그룹으로 구분했다. 앞서 〈그림 2〉와 〈그림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북정책 및 안보정책에 관한 연령대별 분포는 70년대생을 중심으로 역U자형과 U자형을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는 70년대생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 세대를 구분하고, 〈그림 7〉은 연령대별 세 그룹이 각각 남북관계와 사드배치에 관한 네 조합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조합A의 경우 70년대생의 47.3%가 해당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70년대 이후 출생의 35.9%였고, 70년대 이전 출생은 24.6%만이 이 조합에 포함되었다. 대북 강경책과 사드배치에 모두 찬성하는 조합C의 경우 70년대 이전 출생(44.2%) > 70년대 이후 출생(32.8%) > 70년대생(25.8%) 순이었다. 조합A와 조합C에서 70년대생을 중심으로 U자형 혹은 역U자형 분포가 형성되어 있음을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연령대별 단선적인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림 7〉의 세로축인 조합B와 조합D에서 연령대별 단선적인 변화가 발견된 점이 흥미롭다.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 역시 찬성하는 조합B에서는 70년대 이전 출생인 고연령층의 비율이 26.9%로 가장 높았고, 70년대생(18.4%)과 그 이전 출생(14.7%) 순이었다. 반면 대북 강경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조합D는 70년대 이후 출생인 청년층의 비율이 16.6%로 가장 높았고, 70년대생(8.6%)과 그 이전 출생(4.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합B는 나이 든 세대일수록 반대로 조합D는 젊은 세대일수록 선택하는 경향이 발견된 것이다. 기존 진보-보수 시각인 조합A와 조합C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연령대별 선형분포라고 할 수 있다.

IV. 회귀분석

1. 자료, 변수 및 분석모형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 결과는 동아시아연구원 주관으로 한국리서치에 의해 실시된 ‘2017년 대선 패널조사’ 자료이다.⁵⁾

대북정책 및 안보정책에 이념과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기본 가설로 하는 이 연구의 기본 종속변수는 각각 대북 교류협력정책 및 사드배치 찬성 여부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변, 즉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와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에서 교류협력을 지지하면 1, 강경을 지지하면 0으로 코딩되었다. 사드배치에 관한 질문에서는 찬성할 경우 1, 반대할 경우 0으로 코딩되었다.

이 연구의 관심 독립변수는 연령과 이념이다. 나이에 따라 대북 교류협력정책과 사드배치 찬성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기본적으로 연령은 응답자의 만 나이를 연속변수로 사용했다. 다만 젊은 세대는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나이 든 세대는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사드배치에 찬성할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비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대와 대북 및 안보정책의 지지 여부가 단선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70년대생이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가장 반대한다는 예비분석 결과를 반영해, 이 연구는 연령변수 외에 70년대생과 그 이전 및 이후 세대로 3분한 세대 더미변수를 관심

5) 이 연구에 사용된 주요 설문문항은 2017년 4월 18~20일 실시된 대선 사전조사(1차) 자료에 근거한다. 조사는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할당추출 비율에 따라 표집된 1,500명의 유권자에 대한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19.5%이다(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5\%$).

변수로 추가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연령 및 세대 변수와 별개로 이념 정향의 특징을 발견하기 위해 응답자의 자기이념 평가를 또 다른 관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념변수는 ‘가장 진보적(0)’부터 ‘가장 보수적(10)’까지의 11점 척도를 사용했고, 그 가운데인 5는 중도성향으로 코딩되었다.

이 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는 교육수준(대학재학 이상의 더미변수), 성별(더미변수), 가계수입(5단계 서열변수), 주관적 계층인식(3단계 서열변수) 및 출신지역(호남 및 영남 더미변수) 등이다. 또한 이 설문결과가 2017년 대선 직전에 조사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찬성 여부(더미변수)가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대별 이념인식 요인이 상이하고 청년세대의 경우 복지·성장의 우선순위가 결정적이라는 기존 연구(윤성이·이민규, 2014)의 분석을 수용해, 성장보다 복지우선 변수(더미)가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이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령	1157	46.8522	14.42082	20	86
이념	1139	4.751536	2.122083	0	10
교육	1156	0.6963668	0.4600252	0	1
성별	1157	0.5401901	0.4985977	0	1
수입	1137	4.098505	1.220774	1	5
계층인식	1157	1.629213	0.7913528	1	3
호남출신	1152	0.1805556	0.3848166	0	1
영남출신	1152	0.3012153	0.4589853	0	1
탄핵찬성	1129	0.870682	0.3357003	0	1
대북 교류협력정책	1135	0.5480176	0.4979084	0	1
사드배치	1110	0.5801802	0.4937517	0	1
복지확대	1140	0.5201754	0.499812	0	1

이 분석은 대북 교류협력정책 및 사드배치에 관한 찬성 여부를 종속 변수로 설정했으므로, 기본 회귀분석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이 사용되었다.

2. 분석결과

1) 대북정책의 방향성 및 사드배치 찬성 여부

〈표 2〉는 대북 교류협력정책 지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분석 결과이다. 모형1~4는 연령 혹은 세대 간 차이 여부를 고찰하기 위한 세대 간 비교이고, 모형5~7은 70년대생과 그 이전 및 이후 세대 내에서 대북 교류협력정책 지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세대 내 비교이다.

모형1에서 이 분석의 관심 독립변수인 이념은 음의 값을 가지면서, 그리고 연령은 양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교류협력정책에 대해 보수성향의 응답자일수록 부정적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념변수의 영향력은 이론적 예측과 일치했으나, 연령변수 영향력의 해석에는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기술통계의 예비분석 결과인 〈그림 2〉와 〈그림 3〉에 따르면 연령대별 교류협력정책 지지율은 70년대생을 정점으로 한 역U자형 분포였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90년대생의 교류협력정책 지지율은 80년대생과 70년대생을 거치며 상승했다가 70년대생을 정점으로 다시 낮아지는 경향이 예비분석에서 확인된 바 있다. 모형1의 결과는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할 경우에도 연령변수가 양의 값으로 통계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모형2~4는 기본이 되는 모형1에 3분한 각각의 세대 더미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모형2에서 70년대 이전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70년대 이전 세대는 다른 세대들에 비해 의미 있는 세대적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모형3에서 70년대생 더미변수는 양의 값으로, 모형4에서 70년대 이후 더미변수는 음의 값으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70년대생은 연령변수를 통제할 상태에서도 그 이전 및 이후 세대들에 비해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 것이고, 70년대 이

〈표 2〉 대북 교류협력정책 지지 여부

	세대 간 비교				세대 내 비교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70년대 이전	70년대생	70년대 이후
연령	0.0315**	0.0335**	0.0315**	0.0137	-0.00310	0.0527	0.0447 ⁺
	(0.00641)	(0.00992)	(0.00640)	(0.00946)	(0.0169)	(0.0580)	(0.0269)
이념	-0.170**	-0.170**	-0.168 ⁺	-0.167**	-0.185**	-0.325**	-0.0558
	(0.0392)	(0.0391)	(0.0392)	(0.0393)	(0.0555)	(0.107)	(0.0726)
교육	0.280	0.272	0.238	0.265	-0.0658	1.073 ⁺	0.599
	(0.184)	(0.186)	(0.186)	(0.185)	(0.249)	(0.478)	(0.427)
성별	-0.0445	-0.0458	-0.0470	-0.0388	-0.0406	0.290	-0.170
	(0.147)	(0.147)	(0.147)	(0.148)	(0.227)	(0.321)	(0.264)
수입	-0.0101	-0.00781	-0.0202	-0.0498	-0.0792	-0.348 ⁺	0.0356
	(0.0710)	(0.0715)	(0.0711)	(0.0727)	(0.109)	(0.211)	(0.138)
계층인식	0.0755	0.0767	0.0914	0.0952	0.351 ⁺	-0.0626	0.0116
	(0.107)	(0.108)	(0.108)	(0.108)	(0.188)	(0.260)	(0.151)
호남출신	0.797**	0.801**	0.816**	0.796**	1.148 ⁺	0.117	0.531
	(0.214)	(0.215)	(0.215)	(0.215)	(0.305)	(0.495)	(0.415)
영남출신	0.139	0.140	0.132	0.120	0.236	-0.433	0.210
	(0.167)	(0.167)	(0.167)	(0.167)	(0.261)	(0.361)	(0.297)
탄핵찬성	1.015**	1.009**	0.974**	0.987**	0.878**	1.945 ⁺	
	(0.258)	(0.259)	(0.259)	(0.257)	(0.284)	(1.177)	
복지확대	0.360*	0.360*	0.367*	0.377*	0.0467	0.502	0.752**
	(0.156)	(0.156)	(0.157)	(0.157)	(0.240)	(0.330)	(0.291)
사드배치	-1.596**	-1.593**	-1.583**	-1.592**	-1.791**	-1.533**	-1.394**
	(0.162)	(0.162)	(0.163)	(0.163)	(0.293)	(0.337)	(0.261)
70년대 이전		-0.0737					
		(0.273)					
70년대생			0.343 ⁺				
			(0.177)				
70년대 이후				-0.644*			
				(0.254)			
상수	-0.965	-1.029	-0.985	0.205	1.417	-0.799	-1.670
	(0.632)	(0.676)	(0.631)	(0.781)	(1.334)	(3.036)	(1.106)
N	1,023	1,023	1,023	1,023	462	250	306
pseudo R-sq	0.192	0.192	0.195	0.197	0.229	0.244	0.137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

후 세대는 그 이전 세대들에 비해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2에서 70년대 이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이 두 가지 경향성이 상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70년대 이전 세대는 70년대 이후 세대보다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70년대생보다는 그 비율이 낮은 경향이 모형2~4에서 확인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연령대효과가 대북정책 영역에서 검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념과 연령 혹은 세대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통제변수 중에서는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호남출신 응답자들은 김대중 정부 이후 일관되게 교류협력정책에 지지를 보낸 바 있는데, 그 결과도 예측과 일치했다. 또한 탄핵과 복지확대에 찬성할수록, 그리고 사드배치에 반대할수록 교류협력정책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모형1~4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다음은 세 그룹으로 나눈 세대 내에서 대북 교류협력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자. 모형5~7은 각각 70년대 이전, 70년대생, 70년대 이후로 분석대상을 나눈 후,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 첫째, 모형5와 모형6에서는 연령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모형7에서는 양의 값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70년대 이전 세대와 70년대생에서는 그룹 내에서 연령이 높아져도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모형7의 결과는 70년대 이후 세대 중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할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청년세대로 갈수록 교류협력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둘째, 모형5와 모형6에서는 이념변수가 음의 값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모형7에서는 이념변수의 영향력이 사라졌다. 70년대 이전 세대와 70년대생에서는 자기이념 평가가 진보적일수록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더 높지만, 70년대 이후 청년세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 결과는 장년세대에서 대북정책과 이념성향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청년세대에서는 두 변수 간에 영향력이 없다는 윤성이·이민규

(2014)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대북정책 평가에 미치는 이념의 영향력이 세대별로 차별화된다는 이 연구의 두 번째 가설도 검증되었다.

복지확대 변수의 경우 70년대 이전 세대와 70년대생에서는 교류협력 정책 평가에 영향력이 없었지만, 70년대 이후 세대에서는 양의 값으로 통계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 통계모형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 인과 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힘들지만, 청년세대에서는 복지확대와 이념, 그리고 교류협력정책 사이의 관계가 다른 세대와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표 3〉은 〈표 2〉와 종속변수만 다를 뿐 분석모형과 변수설정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사드배치 찬성 여부에 이념과 연령 혹은 세대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정리된 것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보수적인 이념을 가질수록 사드배치에 찬성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결과가 모형1에서 발견되었다. 〈표 2〉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3분한 세대 더미변수를 각각 포함시킨 모형2~4에서 70년대생이 사드배치에 가장 부정적이라는 결과도 예비분석의 예측과 일치했다. 그러나 예비분석인 〈그림 2〉와 〈그림 3〉에 따르면 70년대 이전 세대가 사드배치에 가장 찬성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모형2와 모형4의 결과는 이와 일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70년대 이후 세대의 사드배치 지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념과 연령 혹은 세대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통제변수들은 대개 이론적 예측과 일치해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2〉와 마찬가지로 〈표 3〉 역시 세 그룹으로 나눈 세대 내에서 사드배치 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모형5의 70년대 이전 세대와 모형6의 70년대생에서는 연령변수가 각각 양의 값과 음의 값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70년대 이전 세대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경향이, 70년대생 내에서는 70년대 초반생들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대북 교류협력정책 지지와 마찬가

〈표 3〉 사드배치 찬성 여부

	세대 간 비교				세대 내 비교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70년대 이전	70년대생	70년대 이후
연령	0.0233**	0.0150	0.0231**	0.0364**	0.0703**	-0.114*	-0.0257
	(0.00680)	(0.0106)	(0.00681)	(0.0104)	(0.0227)	(0.0564)	(0.0273)
이념	0.168**	0.168**	0.167**	0.166**	0.166**	0.273**	0.0927
	(0.0416)	(0.0417)	(0.0417)	(0.0416)	(0.0628)	(0.102)	(0.0733)
교육	-0.221	-0.198	-0.184	-0.204	-0.140	-0.0730	-0.129
	(0.192)	(0.193)	(0.193)	(0.192)	(0.272)	(0.467)	(0.423)
성별	0.475**	0.479**	0.478**	0.474**	0.317	0.217	0.959**
	(0.152)	(0.152)	(0.153)	(0.152)	(0.255)	(0.310)	(0.262)
수입	-0.185*	-0.192*	-0.173*	-0.158*	-0.154	-0.201	0.0864
	(0.0766)	(0.0768)	(0.0770)	(0.0786)	(0.136)	(0.200)	(0.139)
계층인식	0.170	0.164	0.154	0.156	0.177	0.325	0.0216
	(0.104)	(0.104)	(0.104)	(0.104)	(0.208)	(0.251)	(0.146)
호남출신	-0.235	-0.250	-0.251	-0.234	0.0664	-1.025*	0.00187
	(0.206)	(0.207)	(0.207)	(0.207)	(0.308)	(0.488)	(0.411)
영남출신	0.245	0.247	0.255	0.256	0.707*	0.156	0.0292
	(0.180)	(0.180)	(0.180)	(0.180)	(0.326)	(0.349)	(0.301)
탄핵찬성	-1.046**	-1.013**	-1.007**	-1.043**	-0.847*		-0.405
	(0.372)	(0.373)	(0.372)	(0.372)	(0.421)		(1.185)
복지확대	-0.751**	-0.752**	-0.761**	-0.765**	-1.004**	-0.672*	-0.634*
	(0.159)	(0.159)	(0.159)	(0.159)	(0.255)	(0.322)	(0.293)
대북 교류협력 정책	-1.625**	-1.619**	-1.602**	-1.602**	-1.830**	-1.507**	-1.393**
	(0.165)	(0.165)	(0.165)	(0.165)	(0.300)	(0.338)	(0.261)
70년대 이전		0.278					
		(0.274)					
70년대생			-0.308+				
			(0.175)				
70년대 이후				0.450*			
				(0.266)			
상수	1.195+	1.433+	1.191+	0.351	-1.633	5.151*	1.025
	(0.715)	(0.752)	(0.715)	(0.873)	(1.776)	(2.575)	(1.667)
N	1,023	1,023	1,023	1,023	462	238	311
pseudo R-sq	0.245	0.246	0.247	0.247	0.303	0.200	0.159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

지로 70년대 이후 청년세대에서는 이념변수가 사드배치 찬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밖에 70년대생에서 호남출신 응답자들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경향이, 70년대 이전 세대에서 영남출신 응답자들이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경향이 발견됐다. 특이사항으로는 다른 세대에서 발견되지 않은 성별변수가 70년대 이후 청년세대에서 발견됐다는 점이다. 70년대 이후 청년세대에서 남성일수록 사드배치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20~30대 남성의 경우 병역문제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병역의 당사자로서 느끼는 안보불안감이 사드배치 찬성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017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북 및 안보정책의 연령대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국한했기 때문에, 1970년대생이 다른 세대에 비해 대북 교류협력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율이 높은 이유를 본격적으로 규명하기는 힘들다. 그 이유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이 세대의 정치적 특징이 형성된 사회화 시기부터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를 통해 정치세대적 특성의 변화양상을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허석재, 2014). 통일 및 북한에 대한 호감도 등 대북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존재하지만, 대북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장기적 시계열 자료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관한 심층분석이 쉽지 않다.

다만 이 연구는 1970년대생의 주관적 이념인식이 지난 네 번의 제16~19대 대선기간 동안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평균중앙화한 주관적 이념평가를 생애주기 축에 표현한 그래프(배진석, 2017: 178)를 보면, 1970년대생은 다른 세대와 달리 2002년 대선부터 2017년 대선까지 주관적 이념인식의 변동성이 거의 없었다. 앞서 <그림 2>에서도 확인했듯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영향으로 지난 5년간 다른 연령대의 대북 교류협력정책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비해 70년대생의 대북 교류협력정책

지지율에는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70년 대생의 대북정책 평가에는 이념의 영향력이 크고, 이 세대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관적 이념인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세대에 비해 대북 교류협력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배경일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2) 이념과 연령대의 상충

기존의 전통적 진보시각은 대북 강경책보다는 교류협력정책을, 한미동맹 강화보다는 자주국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존의 전통적 보수 시각은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예비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전통적 진보-보수 시각과 상충되는 조합도 2017년 조사결과에서 의미 있는 비중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예비분석 <그림 5>, <그림 6>, <그림 7>에서 살펴본 네 개의 조합을 종속변수로 삼아 이념과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모형 A에서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반대한 응답자는 1로 코딩되었고, 나머지 경우는 0으로 코딩되었다. 모형 B-D도 같은 방식으로 두 정책의 조합에 맞도록 코딩되었다.

<표 4>에는 대북정책의 교류협력-강경 방향과 사드배치 찬반 여부의 4개 조합에 이념과 연령이 미친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먼저 모형 A(교류협력-사드배치 반대)와 모형 C(강경-사드배치 찬성)에는 이념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했으나, 모형 B(교류협력-사드배치 찬성)와 모형 D(강경-사드배치 반대)에는 이념의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예비분석 <그림 5>의 예측과도 일치했다. 즉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은 전통적 진보시각인 모형 A에서 영향력을 발휘했고, 마찬가지로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은 전통적 보수시각인 모형 C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 조합에서는 <표 2>와 <표 3>에서 확인된 연령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모형 B와 모형 D에서는 진보-보수의 이념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표 4〉 남북관계 및 사드배치 관련 전통적 진보-보수 시각과 상충적 태도

	모형 A: 조합A	모형 B:조합B	모형C:조합C	모형D:조합D
	교류-사드반대	교류-사드찬성	강경-사드찬성	강경-사드반대
연령	0.00910 (0.00629)	0.0208** (0.00676)	-0.00880 (0.00623)	-0.0545** (0.0107)
이념	-0.232** (0.0406)	-0.0423 (0.0394)	0.251** (0.0388)	-0.0409 (0.0611)
교육	0.558** (0.190)	-0.150 (0.189)	-0.239 (0.182)	-0.466 (0.288)
성별	-0.247+ (0.144)	0.0997 (0.157)	0.481** (0.145)	-0.515* (0.227)
수입	0.147* (0.0735)	-0.0630 (0.0728)	-0.0570 (0.0691)	0.191 (0.126)
계층인식	-0.0805 (0.102)	0.111 (0.108)	0.0518 (0.0994)	-0.228 (0.175)
호남출신	0.606** (0.192)	0.297 (0.205)	-0.825** (0.221)	-0.319 (0.339)
영남출신	-0.0650 (0.172)	0.103 (0.182)	0.0870 (0.161)	-0.379 (0.273)
탄핵찬성	1.699** (0.443)	0.577* (0.269)	-1.245** (0.238)	0.393 (0.567)
복지확대	1.051** (0.156)	-0.449** (0.165)	-0.535** (0.151)	-0.285 (0.236)
상수	-3.192** (0.732)	-2.408** (0.666)	-0.00619 (0.604)	0.216 (1.076)
N	1,076	1,076	1,076	1,076
pseudo R-sq	0.146	0.036	0.145	0.086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

대신, 연령변수가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변수는 모형B에서 양의 값으로, 모형D에서는 음의 값으로 유의미했다. 이들 조합에서는 이념의 영향력이 사라진 대신 나이가 많을수록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찬성하며(모형B), 나이가 적을수록 강경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반대하는(모형D)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의 영향력이 사라진 공간에서 연령효과가 이를 대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2017년 대선 직전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 및 안보정책에 이념과 연령대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이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발견했다.

첫째, 연령대가 대북 및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단선적이지 않다. 젊은 세대는 대북 교류협력정책과 자주국방을 지지하고, 나이 든 세대는 대북 강경책과 한미동맹을 지지한다는 공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진보정책 조합인 교류협력정책과 자주국방은 청년세대보다 중년세대에 의해 더 적극적으로 지지되고 있었다. 이 연구는 대북 및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1970년대생이 그 이전 혹은 이후 세대보다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더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덜 찬성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둘째, 이념이 대북 및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별로 차별적이다. 중장년세대의 대북관련 인식은 대체로 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청년세대의 대북관련 인식에는 이념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분석결과 197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에서는 진보적일수록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보수적일수록 대북 강경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찬성했다. 다만 1970년대 이후 세대에서는 진보-보수의 이념인식이 대북 및 안보정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에서 연령은 효과가 없고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이 엇갈릴 때에는 이념 대신 연령효과가 확인된다.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전통적인 진보정책 조합이나, 대북 강경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전통적인 보수정책 조합에서는 여전히 이념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지만, 이 균열이 세대균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진보정책의 아이টে이던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고 보수정책의 아이টে이던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그룹이나, 그 반대의 조합인 강경책을 지지하고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그룹의 경우 이념 대신 연령효과가 나타났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전자 그룹을, 젊은 세대일수록 후자 그룹을 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전통적인 진보-보수 정책이 혼재되면서 약화된 이념균열을 세대균열이 대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의 경험적 발견은 몇 가지 실증적·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진보-보수라는 이념균열 내에 부분집합으로 쌓을 이루던 교류협력-강경(대북관계), 자주-한미동맹(안보), 복지-성장(경제정책)의 조합이 청년세대-중장년세대라는 세대균열과 중첩, 강화되어 왔다면, 이 연구의 경험적 발견은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정치균열구조가 세대균열 축을 중심으로 완만한 각도로 교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북한 혹은 북한문제에 대한 태도가 한국사회에서 좌·우 혹은 진보-보수 구분의 가장 유용하고 확실한 잣대라는 기존 주장(강원택, 2005; 김무경·이갑윤, 2005; 박영득·이재묵, 2016; 윤성이, 2006; 이내영, 2002; 허석재, 2014)은 세대 분화에 따라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북한문제가 이념갈등과 중첩되어 세대 간 차이로 표출되었지만(허석재, 2014), 그 표출양상은 연령대별로 단선적이기보다 차별적임을 이 연구는 확인했다.

둘째, 대북인식 및 통일에 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가 흔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젊은 세대의 보수화 내지는 민족의식 약화 등으로 해석하는 최근의 경향은 기존 연구가 구축해놓은 정태적 이념 정의와 이에 근거한 관성적, 표면적 분석으로 해석된다. 세대에 따라 구성하는 이념인식의 요인이 변화하고 있고(윤성이·이민규, 2014), 그 변화를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에 적용할 때 이념과 세대의 분화양상이 보다 정교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이 연구는 확인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청년세대가 보인 냉담한 반응을 일탈적 태도로 규정하거나, 보수정권 10년 동

안 통일교육이 부실해진 결과라는 등의 당파적 접근으로 대응한다면 대북 및 안보정책과 관련된 세대균열은 답을 찾기 힘든 숙제가 될 것이다.

셋째, 기존 연구가 북한에 대한 호감도, 안보 위협의식, 통일비전 등 남북 관계에 관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라면, 이 연구는 정책 이슈로서 상대적으로 급박하고도 미시적인 현안을 다루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017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 및 안보정책 영역에서 세대 및 이념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했다. 정책선호와 관련된 연령대별 특징을 이념요인과 함께 검토함으로써 흥미 있는 발견을 도출했지만, 이 작동원리를 특정 세대의 정치적 특성으로까지 확대해 세대 간 비교로 연결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남북관계와 안보 영역에서 유권자의 정책평가를 분석할 수 있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특정 시점에서의 단순 연령대효과가 아니라 정치세대적 특성을 규명하는 세대효과 연구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투 고 일: 2018년 4월 1일
- 심 사 일: 2018년 5월 5일
- 게재확정일: 2018년 5월 7일

참고문헌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_____.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권 2호: 193-217.
- _____. 2009, “386세대는 어디로 갔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이념과 세대,” 김민전·이내영 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69-96.
- 권영승·이수정. 2011, “글로벌·다문화 사회의 통일외식: N세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권 2호: 1-38.
- 김무경·이갑윤. 2005,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13권 2호: 6-32.

- 김병조. 2015,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일과 평화』, 7권 2호: 3-41.
- 김형준. 2006, “17대 총선과 세대: 정당 지지 분석을 중심으로,”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오름): 269-299.
- 노환희·송정민·강윤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2권 1호: 113-140.
- 문우진. 2016, “한국 선거경쟁에 있어서 이념 갈등의 지속과 변화: 15대 대선 이후 통합자료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5권 3호: 37-60.
- 박명호. 2009, “2008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에 관한 분석: 386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권 1호: 65-86.
- 박영득·이재묵. 2016, “세대에 따른 통일과 대북인식 차이 분석: 코호트 분석을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9권 2호: 31-67.
- 박원호. 2012,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정책선호, 그리고 후보자 선택,” 박찬욱·강윤택 편,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분석』 (파주: 나남): 35-62.
- 배진석. 2017, “투표선택과 이념 성향의 세대요인: 1992~2017년 대통령선거 분석,” 강윤택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6: 촛불집회, 탄핵 정국과 19대 대통령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161-192.
- 변종현. 2012,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21권 1호: 157-186.
- 서현진. 2008, “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참여와 세대에 관한 연구,” 『의정연구』, 14권 2호: 117-142.
- 오세제. 2015, “386세대 세대효과의 특징 연구: 세대효과의 조건적 표출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25집 1호: 133-164.
- 오세제·이현우. 2014, “386세대의 조건적 세대효과: 이념성향과 대선투표를 대상으로,” 『의정연구』, 20권 1호: 200-230.
- 윤성이. 2006,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국가전략』, 12권 4호: 163-182.
- 윤성이·이민규. 2014,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세대 간 특성 비교: 주관적 이념 결정요인과 이념표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24집 3호: 271-292.
- _____. 2016, “정치이념 성향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낙관성의 매개효과 탐색: 20대 연령을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23권 7호: 317-332.
- 이내영. 2002, “세대와 정치이념,” 『계간 사상』, 가을호: 53-79.
- 이우진. 2014, “성과 세대의 정치경제,” 『재정학연구』, 7권 4호: 1-40.

- 정근식·김선·문인철·송영훈·정동준·조동준·천자현·황정미·김희정·이정옥·임수진. 2018, 『2017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정진민. 1992, “한국선거에서의 세대요인,” 『한국정치학회보』, 26집 1호: 145-167.
- _____. 1994, “정치세대와 14대 국회의원 선거,” 『한국정치학회보』, 28집 1호: 257-274.
- 정진민·황아란. 1999,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정치: 세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집 2호: 115-134.
- 정한울. 2012, “민주화 이후 정당 태도갈등의 심화 요인 연구: 상충적 태도갈등이론으로 본 한국유권자의 정당태도 변화,” 『아세아연구』, 150호: 157-197.
- _____. 2013, “안보불감증인가? 안보의식의 변화인가?: 핵 보유국 북한시대의 안보인식 지형과 신안보전략 논의의 시급성,” 『EAI 오피니언 리뷰』, 2013-02호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허석재. 2014, “세대교체와 북한인식의 변화: 코호트 분석,” 『평화연구』, 22권 2호: 73-112.
- Basinger, Scott J. and Howard Lavine. 2005, “Ambivalence, Information, and Electoral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9, No. 2: 169-184.
- Cho, Jinman and Kihong Eom. 2012, “Generation Effect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Presidential Elections,” *Asian Perspective*, Vol. 36, No. 3: 353-386.
- Converse, Philip E. 2000, “Assessing the Capacity of Mass Electorat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3: 331-353.
- Zaller, John and Stanley Feldman. 1992, “A Simple Theory of the Survey Response: Answering Questions versus Revealing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6, No. 3: 579-616.

Abstract**Generation and Ideology Factors of Evaluation
on North Korea and Security Policy***Jin Seok Bae*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three hypotheses to analyze the mechanism of generation and ideology factors in North Korea policy and security policy area. First, the assessment of North Korea and its security policy does not change simply linearly according to age. Second, the influence of ideology on North Korea and security policy vari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ird, depending on how the policies are combine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generation and ideology can exert influence var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in 2017,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First,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the generation born in the 1970s favored the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an their predecessor or later generations, and they were less supportive of THAAD deployment. Second, ideology influenced policy evaluation toward North Korea in the older generation, but it did not in the younger generation. Third, only ideology variable exerted influence in traditional progressive-conservative policy combinations, age variable was not effective. However, age effect was confirmed instead of ideology when the traditional progressive-conservative policy combinations were staggered. The empirical finding of this study is evidence that the politicized structure of Korea, which is ideologically polarized, is cross-cut at a gentle angle along the generation cleavage.

Key words: North Korea Policy, Security Policy, Age Effect, Ideology Effect